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도시 만든다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제1차 시민원탁회의 개최

전주시민들이 2050 탄소중립도시 전주를 함께 만들기 위해 스스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드는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주시는 지난 20일 전북지방환경청 2층 대강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시민참여단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1차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시민원탁회의는 지난 9월 시가 발주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정에서 시민들과 함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2030년, 2040년 감축목표 설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원탁회의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과 내년 2월 12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추진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 시민참여단은 기후위기와 전주시 기후 현황에 대해 알

아보고 조별 토론을 통해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27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국가와 전주시의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탐구를 거쳐 전주시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작성에 대해 집중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내년 2월 12일에 있을 3차 회의에서는 용역사에서 제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3개안(1안 강-중-약, 2안 중-중-중, 3안 약-중-강)을 놓고 시민참여단 50여 명이 난상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1개의 시나리오를 선정해 2030년,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시민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와 그

로 인한 피해 등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내년 5월까지 (사)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수행한다.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는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기본현황 분석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2050년 탄소중립 비전 설정 및 감축 목표 수립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세부 이행계획 수립 △이행관리 및 환류 체계 구축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 등 2050년 탄소중립을 최종 목표로 향후 10개년간의 종합적인 계획이 담겼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은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지침이 될 것"이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주역인 아이들이 편히 숨 쉴 수 있는 미래를 열기 위해 그런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진북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

전주시, 고속버스터미널 남측 일원... 관리지역 최종 선정 최선

30년 이상된 건축물이 많은 전주시 진북동 고속버스터미널 남측 일원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

전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3080+ 도시재생 주택공급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평가'에서 덕진구 진북동 고속버스터미널 남측 일원이 선정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고자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제도로, 지난 4월 1차 후보지로 총 20곳이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2차 후보지로 서울·경기·인천 7곳, 울산광역시 1곳과 함께 전

주 덕진구가 기초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추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최대 1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진북동 고속버스터미널 남측 일원으로, 30년 이상된 건축물이 84% 이상으로 노후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다. 전주시의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시가지 확장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되면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주택이 밀집돼 신속한 주거지 재생이 필요하다.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시는 향후 LH와 협력해 정비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관리계획 수립에 나설 방

참이다. 이후 수립된 관리계획을 전북도에 제안하고 주민공람 등 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최종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번 진북동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으로 주택공급 확대와 더불어 지역 현안 해결 및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면서 "관리지역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나머지 후속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가족 단위 시민·외국인 유학생들, 전주김장문화축제서 김장체험

가족 단위 시민부터 외국인 유학생들까지 함께 김치를 버무리는 김장문화축제가 전주에서 펼쳐졌다.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센터장 유정희)는 지난 19일과 20일 전주종합경기장 등 전주시 일원에서 '2021 전주김장문화축제'의 메인 행사인 김장 체험을 운영했다.

이번 김장체험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전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추진됐던 것과는 달리 일부 드라이브스루 방식과 가족단위 현장 참여, 외국인 유학생 김장체험 등으로 시간과 인원을 분산해 실시했다.

우선 19일에는 시민 450가구가 사전 주문한 김장재료를 종합경기장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수령한 뒤 각 가정에서 김장김치 담그기를 체험할 수 있고



록 진행됐다. 특히 이날 전북대학교 유학생 250여 명은 총 3회로 나누어 김치를 담그는 김장체험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20일에는 현장 체험을 신청한 150가구가 전주종합경기장을 찾아 전주 전통김치 '꽃지' 레시피로 만든 양념으로 김장을 체험했다. 또 미래 세대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 먹거리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별도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또 지역 각 기관·단체에서는 전주푸드에서 구입한 김장재료로 김장김치를 담근 뒤 소외계층에게 기부하는 나눔 행사가 추진돼 훈훈함을 전했다.

축제에 쓰인 김장재료의 경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로, HACCP시설에서 위생적으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 올해로 3회째를 맞은 '2021 전주김장문화축제'는 지난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종합경기장 등 전주시 일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김장체험 외에도 밑씻치기, 고추장·생강청 만들기, 농촌체험, 사연 있는 김장나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화(063-251-2151) 또는 전주푸드마켓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손미나 작가, 전주 글로벌 홍보 노하우 공유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현재 여행작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손미나 작가가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했다.

전주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발맞춰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8일과 19일 손미나 작가를 초청해 마케팅 자문 및 강연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손 작가는 지난 18일 스페인 출신 유학생 등과 전주한옥과 한식들을 중남미, 유럽 국가의 잠재적 관광객들에게 소개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어 19일에는 전주시 간부공무원과 문화관광 담당 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스마트한 여행'을 주제로 한 강연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손 작가는 국내여행 활

성화, 건강한 여행추구, 여행스타일 변화, 공존을 생각하는 여행 등 다양한 여행 트렌드를 제시하고 글로벌 홍보 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전환되면서 전 세계의 잠재적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유럽과 중남미를 대상으로 한국을 소개해 온 손미나 작가와의 마케팅 관련 협업이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성평등×사회혁신×젠더거버넌스, 또 길을 열다'

전주시, '성매매·성착취 문제 해결 위한 제도·인식개선 현안' 주제 토론 진행

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변신한 서노송예술촌에서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참여한 여성인권 활동가들은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부터 자활 지원사업 강화, 법 제도 개선 등을 주장했다.

전주시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선미촌 내 성평등전주에서 성평등전주 개관 2주년 기념 연속기획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성평등×사회혁신×젠더거버넌스, 또 길을 열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젠더 이슈를 진단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일과 12일에 이어 3회째로 열린 이날 컨퍼런스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센터장 송경숙)와의 공동 주관으로 '성매매·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인식개선 현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전주시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성평등전주에서 성평등전주 개관 2주년 기념 연속기획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성평등×사회혁신×젠더거버넌스, 또 길을 열다'를 개최했다.

먼저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를 위한 법적정 운동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성매매를 젠더폭력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없는 범죄가 되고 알선자와 성매수자는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성매매 시장이 되지 않기 위해 변화는 서둘러 시작되어야 하고 그 시작은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부터 하야 할 것"이라

고 주장했다.

이어 '성매매집결지 폐쇄·해체 운동의 의미와 향후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변정희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상임대표는 "성매매 집결지는 전쟁 시기 성노예제의 흔적이자 일상적 성착취를 유지시키는 근거로 작동한 핵심적인 장소"라고 시작하면서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립과 자활 지원을 위해 향후 자활지원센터 운영 및 주거, 생계비 지원 사업과 같은 대책들을 행정이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신박진영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책팀장은 "유형업소가 전국에 그토록 많은

업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성착취적 접대행위를 허용한 결과"라며 "유형과 접대라는 이름으로 착취와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유형업소 직원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소아 변호사와 서난이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황지영 전주시 인권옹호팀장 등과 함께하는 토론도 진행됐다.

시는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성평등전주 개관 2주년 기념식과 함께 성평등전주 걸어온 길,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열고 연속기획 컨퍼런스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